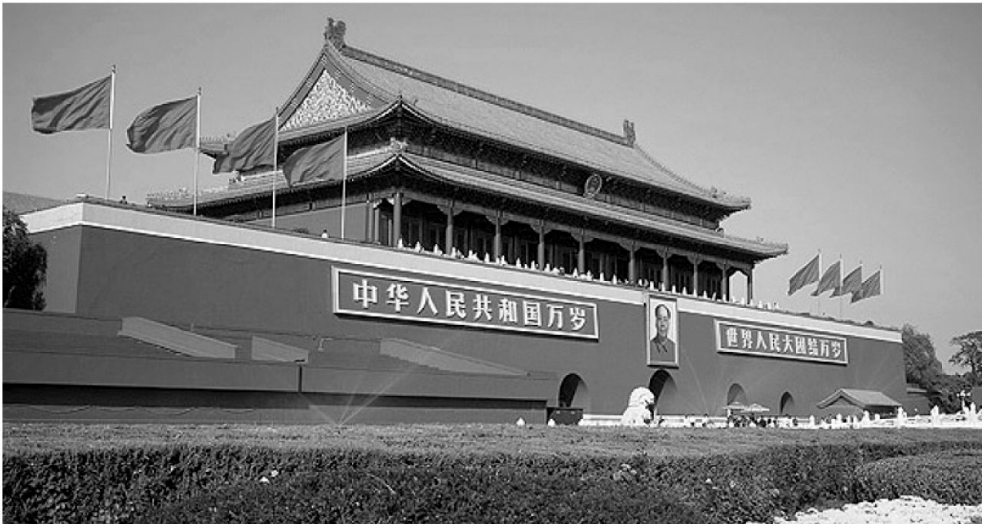


# 중국의 중화민족 만들기와 대내외적 갈등\*



서정경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jkseo@pusan.ac.kr)



## I. 서론

본 연구는 중국 민족정책의 본질이 중화민족이라는 민족을 인위적으로 구축하는데 있다고 보고, 이것이 대내외적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주지하듯, 중국은 한족을 포함한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로서, 소수민족은 중국 전체 인구의 약 8.49%에 불과하지만 전국의 약 64%에 달하는 광범위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sup>1)</sup>

\* 본 논문은 2007년(중점연구소지원사업, 인문사회분야)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413-B00026).

1) 中華人民共和國 中國人民政府, 『中國2010年人口普查資料』 2011年 4月.  
<http://www.stats.gov.cn/tjsj/pcsj/rkpc/6rp/indexch.htm> (검색일: 2012년 6월 5일).

또한, 현 중국 국경이외의 지역에 모국 또는 임시정부를 두고 있는 소수민족 및 과계민족들이 존재하므로, 민족분리의 원심력이 상존하고 있다. 이따금씩 신문지면을 장식하는 위구르족, 티벳족, 또는 몽고족 등 중국 소수민족들의 크고 작은 분규와 유혈사태는 중국의 민족관념 및 체제가 아직까지 안정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1949년 성립된 신중국이 오늘날까지 자국의 민족정책을 전개해오는 가운데 주력해온 ‘중화민족’이라는 관념 및 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담론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목할만한 점은 중국이 ‘중화민족 다원일체론’을 주장하며 ‘중화민족’을 새롭게 창설해나가는 가운데, 민족간 갈등을 억누르고, 국내 안정을 기해오던 과거 행태에서, 최근 들어 현 중국 국경내 존재했던 모든 민족들의 경험과 역사를 모두 중국의 것으로 정립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과거 수천년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변방지역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권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는 현 상황은 역설적으로는 중국에서는 아직도 민족의 형성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현재 구성되고 있는 진행형임을 나타낸다. 즉 ‘중화민족’이라는 과거로부터 전해온 중국의 전통적 민족관념은 오늘날 중국에서 그 실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관방은 현재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정치적 실체와 문화적 실체를 의도적으로 섞음으로써 중화민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중국 대내적으로 소수민족의 저항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주변국들의 우려와 갈등을 야기하는 내재적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중국의 민족 현황, 분포 및 중요성을 살핀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중화민족을 만들기 위해 전개되어온 담론과 정책들을 소개하고, 그로 인해 초래되는 갈등을 대내적, 대외적 갈등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오늘날 중국 민족정책의 내재적 동기를 규명하고, 중국과 민족(조선족)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도출한다.

## II. 중화민족 만들기 : 학계와 정부<sup>2)</sup>

### 1. 민족현황

#### (1) 민족 현황 및 분포

현재 중국에는 주류민족인 한족을 포함, 총 56개의 민족이 살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정부는 1954년 민족식별조사(民族識別調查)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과학적 증거(科學依據)” 원칙에 따라 맑시즘의 민족이론에 근거하여 단일한 “언어”, “지역”, “경

2) 본장은 서정경·차창훈·원동욱, “중국의 민족인식과 정책: 관방의 정책과 학계의 관점,” 『중국문화연구』(서울: 중국문화연구회, 2011) 제18권에 실린 글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도표 1〉 중국 민족 현황

접경	한국, 러시아, 몽골, 중앙아 3국,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14개 국가와 육지 접경
언어	漢語 (중국어) 사용. (방언 및 소수민족 언어 존재)
민족 (총 56개)	한족(漢族), 몽골족(蒙古族), 회족(回族), 티벳족(藏族), 위구르족(維吾爾族), 묘족(苗族), 이족(彝族), 좡족(壯族), 부이족(布依族), 조선족(朝鮮族), 만족(滿族), 둥족(侗族), 야오족(瑤族), 바이족(白族), 투자족(土家族), 하니족(哈尼族), 카자흐족(哈薩克族), 다이족(傣族), 여족(黎族), 리수족(傈僳族), 외족(佤族), 서족(畲族), 고산족(高山族), 라후족(拉祜族), 수족(水族), 동상족(東鄉族), 나시족(納西族), 장포족(景頗族), 키르기스족(柯爾克孜族), 토족(土族), 다월족(達翰爾族), 무라오족(么佬族), 창족(羌族), 부랑족(布郎族), 씨라족(撒拉族), 마오난족(毛南族), 계로족(仡佬族), 석백족(錫伯族), 아창족(阿昌族), 푸미족(普米族), 타지크족(塔吉克族), 누족(怒族), 우즈베크족(烏孜別克族), 아라스족(俄羅斯族), 에벵크족(鄂溫克族), 더양족(德昂族), 바오안족(保安族), 위구족(裕固族), 징족(京族), 다다르족(塔塔爾族), 두룽족(獨龍族), 오르준족(鄂倫春族), 허저족(赫哲族), 먼바족(門巴族), 푼바족(珞巴族), 지뉘족(基諾族).

제, “문화”라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별하였고, 다음으로 “민족바람(民族 依 願)” 원칙에 따라 개개민족이 독자적 민족단위로 존재할 의사여부를 따졌다. 그 결과 조건에 부합하는 공동체를 단일민족으로 묶어 획일적으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공산당의 행정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된 민족식별 및 언어조사의 결과, 현재 56개 민족이 분류되어 공식화 되었지만 이것이 오늘날 중국 국토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민족을 총망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분류작업의 진행결과에 따라 민족의 수는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중국 당국에 의해 어느 종족에 속하는지 정립되지 못한 미식별 민족만도 현재 약 73만명에 이른다.<sup>3)</sup>

소수민족은 중국 전체 인구의 약 8.49%에 불과하지만 전국의 약 64%에 달하는 광범위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sup>4)</sup> 중국의 행정체계상 총 4개의 직할시, 5개의 자치구, 22개의 성(省)으로 구분되는데 국내 5개의 소수민족 자치구(內蒙古(내몽고)자치구, 新疆(위구르)자치구, 西藏(티베트)자치구, 廣西壯族(광서장족)자치구, 寧夏回族(영하회족)자치구) 외 대부분의 성(省), 시(市)에도 소수민족 자치주(自治州)와 자치현(自治縣)이 있다. 흑룡강(黑龍江), 길림(吉林), 요녕(遼寧), 감숙(甘肅), 칭해(青海), 내몽고(內蒙古), 신강(新疆), 티벳(西藏), 광서(廣西), 영하(寧夏) 지역 사천(四川), 운남(雲南), 귀주(貴州), 광둥(廣東), 호남(湖南), 하북(河北), 호북(湖北), 복건(福建), 해남(海南) 등의 성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중 소수민족이 가장 많은 성은 운남성(雲南省)이다.

3) K. Palmer Kaup, 2000, *Creating The Zhuang: Ethnic Politics in China*, (Lynne Rienner Publisher). 저자에 따르면, 공산당 창당이전에는 오늘날 중국의 소수민족중 가장 다수를 점하는 장족(壯族)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산당이 소수민족정책을 수립한 초기 17년 동안에도 장족이라는 용어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4) 中華人民共和國 中國人民政府, 『中國2010年人口普查資料』, 2011年 4月.  
<http://www.stats.gov.cn/tjsj/pcsj/rkpc/6rp/indexch.htm> (검색일: 2012년 6월 5일).

〈도표 2〉 소수민족 분포지역도



\* 출처: <http://image.baidu.com> 少数民族分布圖 (검색일: 2013년 8월 1일)

2011년 4월 28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제6차 인구센서스<sup>5)</sup>에 따르면 중국의 공식인구(홍콩, 마카오 제외)는 13억3,972만명이다. 민족구성상 한족은 12억2,593만2641명으로 전체의 약 91.51%를 차지하였고 소수민족은 8.49%에 이른다. 제5차 인구센서스 결과와 비교했을 때 소수민족의 인구증가율이 한족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민족 전체의 인구가 33만 6,100명 증가하였고, 그중 회족 인구가 32만 8,5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34.77%를 차지한다. 소수민족 인구나 회족 인구의 년평균증가비율은 각각 1.65%, 1.64%로 이는 모두 한족에 비해 0.39%, 0.38%씩 높은 것이다.<sup>6)</sup> 이러한 현상은 소수민족에게 엄격한 산악 제한정책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에 의해 가장 큰 소수민족으로 분류된 민족은 좡족(壯族)이고 다음으로는 만주족(滿洲族)이다. 한국과 민족 성분이 같은 재중동포(조선족, 朝鮮族)의 경우 현재 중국에서 14번째로 큰 소수민족으로 자리하고 있다.

5) 본 인구조사는 2010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실시되어 11월 10일 종료되었으며, 결과는 2011년 4월 28일 발표되었다.

6) “宁夏少数民族人口增长快于汉族” 新華網, [http://news.xinhuanet.com/society/2011-05/10/c\\_121400434.htm](http://news.xinhuanet.com/society/2011-05/10/c_121400434.htm). (검색일: 2011년 7월 5일).

이 외에도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 마카오의 경우 인구가 각각 약 709만 7600명, 약 55만 2300명이며, 중국이 자신의 23번째 성으로 간주하는 대만의 인구는 2316만 2123명이므로 이를 모두 합한 중화권 인구는 총 13억7053만6875명에 달한다.<sup>7)</sup>

## (2) 민족문제의 중요성

중국정부는 오늘날 국가 대비전인 중화민족의 대부흥(中華民族的大復興)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 소수민족 문제의 처리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긴다. 소수민족 문제는 중국의 대내외 정책상 핵심 문제 중 하나인 것이다. 이는 단순히 중국이 56개의 복잡한 민족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

첫째, 중국은 오늘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미래의 명실상부한 지역적, 세계적 강대국이 되기 위한 일정한 과도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때 국가의 통합 및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며, 소수민족 문제가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중국은 총 22,000km에 달하는 긴 육지 국경선을 가지고 있으며 국경선 중 약 90%에 달하는 19,000km가 소수민족 거주지에 걸쳐있다. 55개 소수민족 중 위구르족, 티베트족, 좡족, 묘족, 다이족 등 34개 민족은 중국 뿐 아니라 중국 인접국가에도 거주하는 이른바 과계민족(跨界民族)으로서, 이중 특히 조선족, 몽골족 등은 민족의 주류가 중국 이외 지역에서 모국으로 존재하고 있어 이들로부터의 구심력을 강하게 받고 있기도 하다. 만일 중국에서 한 민족의 독립이 실현될 경우, 이는 다른 민족의 독립을 도미노처럼 초래함으로써 중국 전체의 통합성이 단시일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며, 중국이 줄곧 강력 반대하고 있는 대만 독립의 명분도 제공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중국에는 중국 전체를 붕괴시키는 결과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한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평균 두자리수를 상회하는 경이로운 GDP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이 같은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현대화를 실현하여 강대국이 되고자 한다. 1997년 제15대 정치보고에서 장저민(江澤民)총서기는 “21세기 중엽 건국 100주년이 되면 현대화를 기본실현하고, 부강한 민주문명 수준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到世紀中葉建國一百年時, 基本實現現代化, 建成富強民主文明的社會主義國家)”을 21세기 중국의 전략적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sup>8)</sup> 즉 지금의 과도기를 안정적으로 넘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약 2050년경에는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세계의 명실상부한 강대국이 된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빠른 경제성장률을 뒷받침할 자연 자원 및 에너지의 안정된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

7) 中華人民共和國 中國人民政府, 『中國2010年人口普查資料』 2011年 4月.  
<http://www.stats.gov.cn/tjsj/pcsj/rkpc/6qp/indexch.htm> (검색일: 2012년 6월 5일).

8) 江澤民, 1997, “在中國共產黨第十五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人民日報 1997년 9월 12일.

수적인데, 현재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대다수의 지역에는 상당한 양의 산림자원과 전략적 광물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지역의 자원 및 에너지를 경제성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 대한 당국의 통제권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셋째, 대내적으로 1978년 시작된 개혁개방이후 날로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는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민족정책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빠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강대국화하고 국제사회와의 조우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민족문제가 대외정책의 주요 이슈로서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G2로 명명될만큼 대외적 위치가 제고된 가운데 지역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위치 및 향후 주변국과의 관계여하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 민족문제의 향방은 다민족국가 중국이 공산당 통치정당성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 확보 및 대내적 안정성 담보 여부와, 또한 국가관계의 불확실성이 제고되는 가운데 주변국과의 관계 여하를 가늠해보는 하나의 주요한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것이다.

## 2. 학계의 담론 및 정부의 정책

### (1) 중화민족 다원일체론

중국의 민족정책은 1949년 성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반을 닦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중국특색적 사회주의이론체계(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理論體系)”를 형성해나가는 데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민족정책의 근간에는 ‘중화민족 다원일체론(中華民族多元一體論)’이 핵심적 이론으로 자리한다. 이는 중국 민족학계의 거물인 학시원(何時遠)이 중국 사회과학원 민족학 및 인류학연구소장 재임시 제시한 이론으로서 중국 관방에 의해 정책적으로 채택되고 중국 관영 언론에 의해 신속하게 대대적으로 선전됨으로써 중국 민족정책의 대표이론으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마련하였다. 이는 중국은 자고이래로 다민족이 이룩한 하나의 통일적 대국가였다는 것으로 오늘날 중국국경내 민족 모두가 결국은 중화민족에 속한다는 대의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중앙민족대학 민족학 및 사회학원장 양성민(楊聖敏)도 “중국은 다민족 통일대국으로서의 필연적 원인과 심대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中國作爲多民族的統一大國有必然的原因和深厚的基礎)라는 제하의 장문의 글을 통해 중국이 자고이래로 통일된 다민족국가였다고 역설한 바 있다.<sup>9)</sup> 그렇게 원래부터 중국내 다양한 민족들은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유기체로서 존재해왔기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민족들간 복잡하면서도 유기적 관계가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을 공산당이 통치하면서 억압받던 민족이 비로소 해방되

9) 楊聖敏, “中國作爲多民族的統一大國有必然的原因和深厚的基礎” 『民族論壇』(北京: 湖南省民族事務委員會, 2009), pp.16-7.

고, 민족정책은 날로 발전하면서 민족간 관계도 함께 발전한 결과, 오늘날에는 “한족이 소수민족과 분리될 수 없고 소수민족도 한족과 분리될 수 없으며, 소수민족 상호간에도 서로 분리될 수 없는(漢族離不開少數民族, 少數民族離不開漢族, 少數民族之間也相互離不開)”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한다.<sup>10)</sup>

## (2) 민족자치제

중국정부는 이전에 소수민족은 노예제 또는 봉건농노제의 속박을 받아왔지만 신중국 성립이후 정부의 민족정책에 의해 소수민족들이 비로소 진정한 평등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중국 민족정책의 기본은 민족자치제도(民族區域自治制度)다. 이는 단일한 국가내 각 소수민족이 집거하되, 국가의 통일적 지도체제하에서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치기관을 설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하여 국가 및 민족 내부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를 뜻한다.<sup>11)</sup> 법적으로는 민족 자치지역내 자치기관은 법에 따라 민족과 지역의 내부업무를 자주적으로 관리할 권리, 자치조례를 제정할 권리, 경제건설을 자주적으로 안배, 관리, 발전시키고, 각 문화사회 사업을 자주적으로 발전시킬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 정책의 입안 및 실행단계에는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적잖이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신중국이 성립된 1949년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공동강령(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이 통과되면서 민족지역자치는 중국의 기본정책으로 확정된 바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중국은 5개의 자치구, 30개의 자치주, 124개의 자치현 및 약 1000여개의 자치향으로 확대되었다.

중국이 처음부터 민족자치제도를 선호했던 것은 아니다. 신중국 수립 이전 및 수립 초기 기간만 해도 중국의 다민족정책은 소수민족의 자결권 및 분리까지도 용인한 ‘민족자결’의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중국학계는 당시 러시아 및 국제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당건립 초기였기에 중국은 자신의 민족문제에 관하여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잘 알지 못했고, 국내민족문제를 해결할 성숙한 방안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제국주의가 대중국 침략을 강화하고 있었고 각 지방 군벌들이 할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연방제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변호한다. 즉 중국공산당은 먼저 군벌통치를 척결하고, 인민이 중국을 통일하여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세우면, 각소수민족 지역도 군벌의 통제에서 벗어나 민주자치연방이 될 수 있고 이후에 중국과 함께 중화연방공화국을 건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라는 것이다.<sup>12)</sup> 그러나 1930년대이래 중국 당국의 연방제 입장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9·18사건

10) 李艷杰, “民族區域自治制度的確立及其影響,” 『中國共產黨民族工作歷史經驗研究』中共中央黨史研究室科研管理部·國家民族事務委員會民族問題研究中心,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09), pp.227-8.

11) 『當代中國的民族工作』(北京: 編輯委員會, 1993) p. 229.

12) 董世明, “從聯邦制到民族區域自治:中國共產黨?民族政策的轉變” 『湖北社會科學』2010年 第11期.

등 일본에 의한 중국 동북지역 침략이 가시화되며 혁명의 필요성이 제고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 공산당은 자신의 정책을 점차 조정하여 민족자결과 연방제를 강조하는 동시에 또한 소수민족으로 하여금 통일국가에서 지역자치를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민족 단결을 더욱 강화시키려 하였다.<sup>13)</sup>

### (3) 소수민족 간부양성

신중국 성립초기부터 모택동은 민족전체를 통합시키기 위한 소수민족 간부 양성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1950년 11월 국무원 제60차 국무회의는 〈소수민족간부양성실행방안〉과 〈중앙민족학원실행방안〉 두문건을 통과시켜서 처음으로 각종 소수민족간부의 양성 형식에 대한 과학적 규범을 정하고 체계적으로 정규 간부학교를 개설한다는 설계를 확정지었다.<sup>14)</sup>

한때 중국사회를 현격한 후퇴로 이끌었던 문화대혁명의 10년의 혼동기동안 중국의 소수민족 간부 양성 작업도 심각한 정체상태에 빠졌었다. 이후 등소평이 복권하고 개혁개방이 심화되면서 내륙지역과 연안지역간,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사회적 불평등, 실업, 황금만능주의, 부패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하면서 민족간 갈등이 심화되어지자 소수민족간부 양성의 필요성도 더욱 제고되어졌다. 장저민(江澤民) 주석은 1993년 한족은 소수민족과, 소수민족은 한족과, 그리고 소수민족 서로간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분리될 수 없는 세가지(三個離不開思想)”를 발표함으로써 중국 민족정책의 정당성을 담보 받고자 하였다. 2002년 중국 국무원은 〈개혁을 심화하고 민족교육을 더욱 신속히 발전시키는 것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國務院關於深化改革加快發展民族教育的決定)〉에서 “소수민족 고위층 인재 양성 계획의 실시는 2003년부터 몇몇 중점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소수민족과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특수한 조치를 통해 소수민족 박사, 석사 인재를 양성한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2004년 7월에는 교육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민위, 재정부, 인사부 5개 위원회의 연합하 〈소수민족 고위층 인재를 힘껏 양성하는 것에 관한 견해(關於大力培養少數民族高層次骨幹人才的意見)〉를 공포하였다. 2005년 6월에는 〈소수민족 고위층 주요 인재 양성계획의 실시방안(培養少數民族高層次骨幹人才計劃的實施方案)〉을 제시하였고 이듬해부터 인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이 실시방안은 인재양성에 관한 10가지 주요 내용을 명확히 밝혀놓았다.<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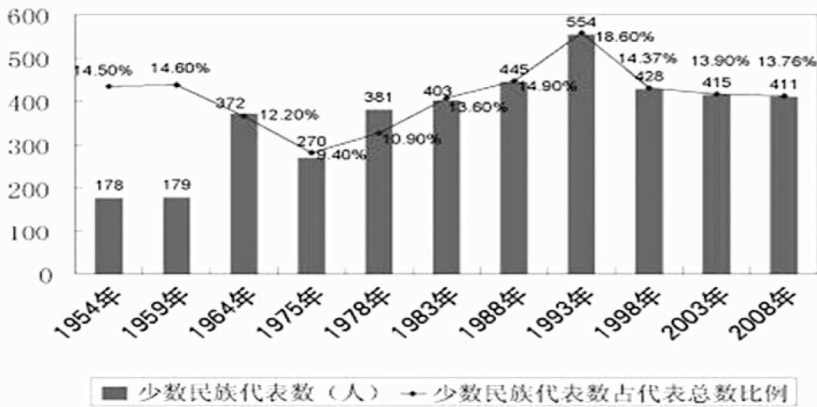
13) 董世明, (2010) p. 82. 1938년 11월 모택동은 “신단계를 논함(論新階段)” 보고서를 통해 항일민족통일전선은 국내 각 당과 각 계급의 일만이 아니라, 국내 각 민족의 일이기도 하다며 각 민족을 단결하여 공동으로 일본에 대항하자고 호소하였다. 각 민족이 한족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를 가지며, 한족과 통일국가를 건립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소수민족과 한족이 함께 사는 지역에서는 그곳의 지방정부가 당지소수민족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방정부의 하나의 부처를 만들고 자신들과 관계된 업무를 관리하게끔 하지는 그의 사고는 이미 중국의 민족정책이 자치라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드러냈다.

14) 陳沛熙, “中國共產黨少數民族干部教育政策探析,” 『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2009年 10月 第5期).

15) 王麗萍·楊春洪, “關於大力培養少數民族高層次骨幹人才的意見”的制定與實施”『中國共產黨民族工作歷史經驗研究』中共中央黨史研究室科研管理部·國家民族事務委員會民族問題研究中心(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09), pp. 1648-9.



〈도표 3〉 역대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소수민족대표가 차지하는 비율



※ 출처: “中國的少數民族政策及其實踐,”

[http://club.china.com/data/thread/1011/2703/26/67/9\\_1.html](http://club.china.com/data/thread/1011/2703/26/67/9_1.html) (검색일: 2009.1.5)

이같은 중국 정부의 노력하 소수민족 간부의 수는 양적으로는 확실히 증가했다. 그러나 상기한 도표2를 보면 알 수 있듯, 역대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경우, 소수민족 간부의 수는 늘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별다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방 및 언론은 소수민족 간부의 수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고 선전하는데 주력한다. 중국 국무원 언론실이 2009년 9월 발표한 〈중국의 민족정책과 각민족 공동번영 발전(中國的民族政策與各民族共同繁榮發展)〉백서에 따르면, 소수민족 간부는 2008년에 290만명을 넘어섰고 이는 1978년에 비해 3배가 넘게 증가한 것이라는 것이다. 전국 공무원 중 소수민족이 차지하는 비율도 9.6%에 달하며, 그중 현급이상에서 종사하는 소수민족간부는 동급간부 총수의 7.7%에 달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백서에는 또한 중앙과 지방 국가 권력기관, 행정기관, 심사기관 및 검찰기관 모두에 상당한 숫자의 소수민족간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 13명 중, 소수민족이 2명이나 있고, 국무원 부총리 및 국무위원 9명 중 2명이 소수민족이라는 것이다. 전국정치협상대회 부주석 25명중 5명도 소수민족이라고 밝히고 있다.<sup>16)</sup>

그러나 이러한 중국 관방이 제시하고 선전하는 통계외에 현실을 보다 깊게 들여다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실제로 중국 최고 권력기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9명 중에는 소수민족 출신이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소수민족 자치지역내 행정기관에는 소수민족을 반드시 선발하도록 규정한 임명할당제가 있지만, 중요한 요직은 중앙정부와 밀접한 접촉라인을 보유한 한족이 대체로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소수민족의 동요를 막고 절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에서 비롯된 상황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에 대한 장

16) “民族政策白皮書: 我國共建立155個民族自治地方,” 中華人民共和國 中央人民政府, [www.gov.cn/jrzq/2009-09/27/content\\_1427937.htm](http://www.gov.cn/jrzq/2009-09/27/content_1427937.htm) (검색일: 2011년 7월 4일).

악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한족의 소수민족 자치지역으로의 대규모 이주를 독려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내몽고자치구(內蒙古自治區), 영하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 광서장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의 경우, 자치구 토착 민족보다도 한족이 더 많이 거주하고 있다. 신강위구르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에도 위구르족 외에도 한족(漢族)이 전체의 37.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13개 소수민족들과 거주하면서 민족간 마찰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 외에도 중국정부는 소수민족에게 일정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소수민족의 소외감을 달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소수민족의 자녀가 대학입시를 치를 경우 일정한 우대점수를 인정해주며, 남녀 구분 없이 자녀 한명만 놓을 수 있는 산아제한정책도 소수민족에게겐 예외다. 소수민족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고위간부로 선발하여 중국 관방의 지시에 따르는 민족간 부로 양성하는 것은 중국적으로는 각민족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력을 높이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관방의 조치들은 모두 민족간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다소나마 완화시키고 소수민족의 지지도를 제고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다. 이는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소수민족 간부양성을 포함한 여러가지 우대정책의 근본 목표가 소수민족들의 순수 권익 보장 자체라기보다 공산당 일당독재를 위한 정치적 통합성 제고라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의 의미한다.

#### (4) 소수민족의 중화민족화

다음으로 주목할만한 것은 중국이 소수민족간 단결을 고취시키고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다양한 역사공정을 진행하여 소수민족의 중화민족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과격한 사회주의국가라는 이미지를 벗고 찬란한 문명과 문화유산을 지닌 문명국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다. 대표적으로 1996년 5월부터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을, 2003년 11월부터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을 공식 실행하여 현 중국 국경선 내에 있는 모든 민족과 역사는 고대로부터 줄곧 중화민족이자 중국의 역사라는 이념을 구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중국은 하상주단대공정을 통해 구체적 연대가 판명되지 않은 하상주 고대국가의 연대를 확정지었다. 구체적으로 하왕조는 기원전 2070년에, 상왕조는 기원전 1600년에, 주왕조는 기원전 1046년에 시작된 것이라는 결론을 맺음으로써 그동안 기원전 841년 서주(西周)말 공화(共和) 원년으로 알려진 중국역사의 가장 이른 시기를 1200여년이나 끌어올렸고 이로써 중국의 역사시대는 총 4070년이 되었다. 다음으로 중화문명탐원공정을 통해 선철과 신화로만 알려졌던 삼황오제(三皇五帝)시대를 역사적 사실로 만듦으로써 중국의 역사를 5000여년에서 최고 1만년전까지 끌어올리는 대역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학계내에서는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삼황오제가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

루고 있지 못하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역사를 늘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중화문명을 확대시키고 민족주의를 발양하려는 의도하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다분히 관방의 정치적 의도가 짙게 배어있다 하겠다.

이 외에도 1986년부터는 인도차이나 지역의 국경정리와 운남성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남공정(西南工程)을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중국장학연구중심(中國藏學研究中心)이 수행함으로써 원나라와 청나라시기를 제외하고는 독립적 국가형태로 존재했던 티벳의 역사를 무시하였다. 특히 이 공정에 의하여 당나라 시절 중앙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했던 8세기 티벳의 역사는 누락되었고 티벳은 독립국가가 아닌 중화민족사에 속하는 일개 중국의 지방정부에 불과하였다는 논리가 개발되었다. 이를 통해 티벳의 분리독립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중국은 2002년부터 신장위구르자치구에 거주하는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신장 위구르족이 전한 무제때부터 중국의 역사에 복속되었다는 서북공정(西北工程)을 진행시킴으로써 위구르족의 독립운동을 막으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동북공정(東北工程)은 200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포함한 동북지역의 고대역사와 문화를 모두 중화민족사에 포함시키려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sup>17)</sup>

### Ⅲ. 민족정책에 따른 대내적 갈등

냉전 기간동안 체제내 잠재되어 그리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던 민족분규 및 종족간 갈등 문제 등이 탈냉전이후 외부로 분출되는 상황을 맞이하며 중국의 민족갈등문제도 수면으로 부상되는 경향을 띄게 되었다. 중국국가통계국 통계에 따르면 중국내 상위 10%와 하위 10%간 소득격차는 1985년 2.9배, 1995년 6.2배, 2005년 9.2배에서 2007년 23배로 확대되었다. 대체적으로 경제발전이 미약한 내륙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을 맞아 중국 관방은 민족간 단결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건국 60주년을 맞아 2009년 중국 지도부가 강조했던 다양한 수사의 핵심은 결국 ‘조화와 민족단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중국의 상황을 보건데 민족간 갈등의 근본적 해소 및 정치적, 실제적 평등의 길은 요원한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의 화약고로 간주되는 민족문제의 향후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2년 1월 및 1999년 9월에 개최된 중앙민족업무회의(中央民族工作會議)에서 1990년대 중국의 민족업무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소수민족과 민족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개혁개방을 견지한다. 민족지역자치제도를 굳건히 견지한다. 소수민족간

17) 공봉진, 『중국민족의 이해와 재해석』, (서울: 한국학술정보, 2010년) pp.147-150.

부를 대량 양성한다. 각민족의 대단결을 더욱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민족업무에 대한 당의 확고한 지도적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8)</sup> 그러나 이 같은 정치적, 수사(修辭)적인 정책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오늘날 중국 공산당은 한족 위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전국적 통치 정당성을 유지시키고 있다. 특히 신장 위구르지역, 티벳지역을 중심으로 당에 대한 소수민족의 지지도는 높아지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분리독립의 불씨가 더욱 커져가는 추세다. 중국정부의 인위적 계획적 동화정책에 따른 부작용에 따라 1993년 이후 중국사회내 집단 소요사태는 2005년에 8만 7천여건, 2006년엔 9만을 넘었고 이후로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sup>19)</sup>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관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의 상황을 살펴보면 민족간 갈등 및 분리주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추세다. 중국의 31개 성, 시, 자치구중 특히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티벳(西藏)자치구는 예로부터 분리 움직임이 거세어 중국당국이 가장 요주의 대상으로 여기는 곳이다. 북경올림픽을 얼마 앞두고 2008년 3월 티벳의 중심 도시 라싸(拉薩)에서 승려들을 중심으로 한 격렬한 시위가 발발하였고 이를 중국 당국이 강경하게 유혈 진압하는 사건이 발발하면서 18명이 숨지고 382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사건은 중국 민족문제의 심각성을 전세계에 드러냈으며 중국 국내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중국의 올림픽 유치 정당성에 대한 찬반 입장이 들끓게 만들었다. 달라이라마를 정실적 지주로 한 티벳 임시정부는 현재 인도에 망명하여 독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티벳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나가려는 티벳 민족의 분리독립 움직임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다음해인 2009년 7월에는 신장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烏魯木齊)에서 한족과 위구르족간 대규모 유혈 충돌이 발발하였다. 중국 관방의 통계에 따르면 폭동으로 인해 총 192명이 사망하였고, 1721명이 부상하는 막대한 인명손실 및 경제적 피해가 초래되었다. 이같은 사건의 발발을 계기로 중국의 민족문제는 또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게 되었다. 중국 당국의 정책에 의해 위구르족들이 오랫동안 살아오던 자신의 터전을 한족에게 빼앗길 뿐 아니라 경제적 수탈도 당한다는 차별의식과 피해감이 위구르족의 분노를 키웠던 것으로써, 이같은 유혈사태 및 민족갈등이 향후 또다시 표출될 가능성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가장 최근인 2011년 5월23일 내몽골자치구에서 한족과 몽골족간 갈등으로 인한 대규모 소요사태가 일어난 사실은 중국의 민족분열의 불씨가 예상보다 인화성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내몽골자치정부는 신중국 성립 후 중국공산당의 통치하 건립된 첫번째 성급 민족자치정권일 뿐 아니라, 그동안 중앙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비교적 높았던 곳으

18) 1992년 중앙민족업무회의의 경우 葉派, “1992年中央民族工作會議,” 『中國共產黨民族工作歷史經驗研究』中共中央黨史研究室科研管理部·國家民族事務委員會民族問題研究中心(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09), pp.971-2 참조, 1999년 중앙민족업무회의의 경우 葉派, “1999年中央民族工作會議,” 『中國共產黨民族工作歷史經驗研究』中共中央黨史研究室科研管理部·國家民族事務委員會民族問題研究中心(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09), pp.976-8 참조.

19) 陳星博, “當前西部多民族地區社會穩定問題的新特點與對策” 『社會發展』, (2010년 제1기), p.58.

로 인식됐던 곳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내몽골지역은 상술한 티벳이나 위구르 자치구에 비해 개혁개방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을 비교적 누리는 곳이었다. 따라서 내몽골의 폭동사태는 민족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경제적 평등성 제고를 주요처방으로 간주하는 중국 당국의 계산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예로서 주목할만 한 것이다. 내몽골 자치구는 원래 초원을 누비던 몽골족 유목민이 살아오던 곳인데 중국정부의 유목 금지 조치 및 한족의 정책적 이주로 인해 전체 인구에서 몽골족은 약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한족이 살고 있는 현실이다. 내몽골자치구 당서기도 한족 출신인 호춘화(胡春華)가 맡고 있어 한족우선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원래 몽골에는 반체제인사들을 중심으로 “징기스칸의 후예로서 몽골 자신들만의 민족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민족감정 및 대의명분을 바탕으로 몽골민족의 분리 움직임이 시도되어왔다. 구체적으로 1992년 몽골족 반체제 인사들을 중심으로 ‘남몽고민주연맹’이 결성되어 몽골인들에 의한 민족국가 건설의 단초가 마련된 바 있다. 반체제인사들은 몽골인에 의한 고도 자치를 이룬 뒤 장기적으로 내몽고를 독립 및 외몽골과의 연합을 통해 몽골 연합국가를 세움으로써 몽골의 정체성을 되찾고자 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주요 인사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이 같은 정치적 배경에 더하여, 신장위구르자치구와 마찬가지로 몽골지역도 개혁개방의 수혜에서 한족에 비해 차별받으며, 특히 몽골지역에 매장돼있는 풍부한 석탄광산 자원의 채굴의 막대한 이익이 한족에게만 돌아간다는 현실적 자각이 더해지면서 몽골족과 한족간 마찰의 골이 깊어진 것이 분쟁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 IV. 민족정책에 따른 대외적 갈등

### 1. 통일 vs 독립

근대시기 외세의 침략과 유린속에서 분열되었던 중국은 오늘날 자국의 핵심 국가목표 중 하나로 “국가의 완전한 통일”을 꼽는다. 이와 관련된 국가로는 대만, 홍콩, 마카오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살펴보자. 주지하듯, 근대시기 서구와 일본의 제국주의의 침략속에서 몰락했던 청나라 제국을 이어 모택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과 장개석(蔣介石)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세력간 정권을 잡기 위한 대결은 1949년 마오쩌둥의 승리와 함께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군사적 지원 및 월등한 화력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세력에 패망한 장제스는 대만이라는 섬나라로 퇴각하였고 중국의 국부 쑨원(孫文)에 의해 창립된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을 계승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양자는 모두 자신을 중국의 정통성을 이은 합법정부로 여기고 상대

를 자신의 일부라고 대내외적으로 주장하였다. 냉전시기 중국은 소련 및 동구권의 지지속에, 대만은 미국 및 서구권의 지지속에 체제경쟁을 벌였으나, 점차 중국의 강대국화가 이뤄지고, 중국과 수교를 맺은 나라들이 일률적으로 대만과의 수교를 폐기하면서 대만의 고립화가 가속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이 자신의 일부일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신성불가침적 영토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은 1894년 발발한 청일전쟁의 패배로 인해 일본에 할양되어진, 그리고 그 이후 미국의 영향권에 속하게 된 자국 영토다. 외세의 침략과 전쟁 패배라는 뼈아픈 아픔과 역사로 인해 대만문제에 대해서는 강렬한 민족의식이 수반되어지는 것이다. 더욱이 대만은 동아시아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 곳으로서 이 지역을 타국의 세력권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전략적 고려도 강하다. 이미 1997년 홍콩, 1999년 마카오의 주권을 차례로 회복했고 남은건 대만 하나라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대만의 공식 입장은 대만이야말로 외세의 침입에 따른 중화민족 대혼란기에 중국의 국부인 쑨원이 세운 “중화민국”이라는 국호와 국기를 그대로 계승한 정통 정권으로서, 찬란한 중화민족의 진정한 계승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 외에도 대만내에는 중국과의 완전한 결별과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대만 독립 타당성의 근거는 대만지역이 중국의 통치권에 정식 편입된것은 대만자체의 유구한 역사속에서 겨우 청나라 이후의 짧은 시기에 불과했고, 그나마 청나라는 중국 전통민족인 한족이 아닌 만주족이 세운 정권이므로 대만은 중국과 원래부터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민의는 과거 민진당으로의 정권교체로 대변되었고 민진당 집권시기 중국과 대만 관계는 긴장과 후퇴를 거듭했었다. 이후 다시 친중국을 표방한 국민당이 재집권하면서 대체적으로 관계의 수렴이 이뤄지고 있는 형국이지만 양자간 갈등의 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중국은 홍콩, 마카오 및 대만과의 지역통합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2003년 홍콩, 마카오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를 맺었고, 대만과는 2010년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를 맺어 지역간 경제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및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만은 ECFA를 통해 대중수출을 확대시키고 경제성장의 동력을 얻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간 상호방문 및 이해도가 증진되고 있는 추세다.<sup>20)</sup> 중화권 지역 및 국가를 점차 통화시



20) 대만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2009년 약 97만 명, 2010년 약 163만 명, 2011년 약 180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켜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화민족의 완전한 통일 및 일체화를 추진하겠다는 중국의 야심 찬 의도인 것이다.

## 2. 중국의 역사 vs 타국의 역사

오늘날 중국은 중국역사상 영토가 가장 넓은 청나라 시대의 국경선을 물려받았는데, 현재의 국경선안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의 역사 및 경험은 중화민족의 것이라 주장하면서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상술한 하상주단대공정, 중화문명탐원공정, 서남공정, 서북공정, 동북공정 등은 모두 동아시아의 장고한 역사를 중국 중심의, 중국의 것으로 재편하는 작업으로서 주변국들과 적잖은 마찰의 소지를 초래하고 있다.

먼저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갈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은 베트남 역사상 기원전 208년 등장한 남비엣(南月)이 베트남의 주장대로 독립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남방지역에 존재한 하나의 지방정권에 불과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베트남과 역사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베트남이 강성해진 후 혹시 있을지도 모를 광동 및 광서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중국의 입장에 대해 베트남이 강력 반발하자 이는 학계의 입장이지 중국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라는 태도로 대응한 바 있다.

앞서 서술하였지만 중국은 징기스칸 및 원나라 역사를 둘러싸고 몽골과도 역사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은 오늘날 국경선에 포함되는 원나라의 역사도 당연히 중국의 역사라는 입장이다. 1995년 ‘몽골국통사’ 출간을 통해 몽골의 영토는 중국에 속한다는 주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는 몽골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였다. 몽골의 경우, 특히 중국의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몽골족이 구성하는 외몽골이 국경밖에 존재하는 상황으로서, 내몽골과 외몽골간 민족 연합 및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의 소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내몽골의 분리 및 영토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징기스칸의 역사도 중화민족의 역사로 재편하려는 것이다.<sup>21)</sup> 이 외에도 오늘날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즉 타슈켄트, 키르기스, 티벳중앙아시아 국가들과도 역사문제를 둘러싼 광범위한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은 또한 우리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sup>22)</sup> 중국과 한국간 민족성분이 겹치는 재중동포(조선족)가 중국의 과계민족(過界民族)으로 존재하고 있고, 재중동포들이 주로 거주하는 동북삼성지역이 과거 한민족의 조상인 고구려의 터전이었다는 사실이 배경으로 작용한다. 대표적으로 동북공정을 둘러싼 양국간 갈등을 들 수 있다. 동북공정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의 준말이자 중국 동북부지역의 역사와 현황에 관

21) 자세한 내용은 이천석, “정체성의 정치: 중국 북방공정과 몽골사에 대한 재해석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7집 3호, 2010년 2월 참조.

22) 한국이 중국과 역사문제를 놓고 빚고 있는 갈등의 수준이 타국과 중국간 갈등이나 마찰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 글에서 보다 많은 편폭을 할애해 서술하였음을 밝힙니다.

던 연구작업을 뜻한다. 당초 중앙정부와 무관하다는 중국측 해명과는 달리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있는 중국 사회과학원의 동북공정이 호금도(胡錦濤)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위 지도자들의 비준아래 추진된 것임이 밝혀지면서 한국의 대중 비난여론은 격화되었고 이러한 역사를 둘러싼 한중 갈등은 해외 언론의 관심을 끌 정도로 확대된 바 있다. 비록 중국의 동북공정이 2008년 공식 종료되고 한국의 반발을 의식하여 중국이 보고서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한국내 일반국민 및 시민사회의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이다.<sup>23)</sup> 또한 현재 불거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조선족 연변자치구가 위치해있는 간도지역을 둘러싼 한중간 갈등의 불씨도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이다. 간도가 중국의 영토로 넘어가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일본은 1907년 8월 23일 간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1909년 9월 4일 만주철도 부설권 등을 얻는 조건으로 간도를 청에게 넘김으로써 간도가 한민족과 분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52년 중일간 평화조약에서 1941년 12월 9일 이전 양국간 체결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무효라고 명기한 만큼 일본이 한국의 국권을 강권 침탈하고 중국과 맺었던 간도조약이 무효인 것은 국제법상 명확하다. 간도를 상실한지 이미 많은 시일이 흘렀고, 중국의 주권에 복속된 상황에서 중국은 향후 통일한국시대에 간도귀속문제가 불거질 것에 대비하여 해당 지역의 고구려, 발해 역사를 포함한 한민족의 흔적과 문물을 모두 중국의 유무형 문화재로 지정하고 자국의 역사로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반발 및 저항심리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가장 최근인 2011년에는 중국이 한국의 전통 문화의 핵심이자 한민족의 정서가 응축되어 있는 민족문화의 정수(精粹)인 ‘아리랑’을 자국의 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의 전통문화라는 이유로 중국의 중요무형문화재로 지명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을 하는 일이 발생함으로써 한중간 문화를 둘러싼 마찰이 제고되고 있다. 동북공정으로 인해 중국의 문화침략에 예민해져있는 한국민들은 대체로 이일에 대해 공분(公憤)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 문제의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고대시대 존재했던 부족들은 대부분 상당히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과거의 역사를 19세기에 정립된 근대적 민족 및 국가의 개념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자국 이익관에 따라 현 중국 영토내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의 문화적 실체와 정치적 실체를 교묘히 섞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지역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며 역사를 왜곡함에 따라 주변국과의 마찰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중간 동북공정, 간도문제, 중국의 아리랑 자국문화 추진 문제는 모두 향후 한중관계에서 상당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공

23)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2004년 8월 25일 고구려사를 자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의도는 향후 대 한국(Greater Korea) 탄생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는 분석과 함께 고구려사를 둘러싼 한중간 논란을 소개했다. 여기서 뉴욕타임즈는 고구려사 논쟁으로 중국과 일본간 축구경기에서 한국인이 일본팀을 응원할 정도로 중국의 ‘신중화주의’를 비판하는 한국내 반중감정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정경, “한미일 안보관계 복원과 중국,” 『한반도 주변국 정세와 한국의 안전보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8년, p. 89에서 재인용.



산이 크다. 이러한 문제들을 대하며 한국은 국익의 입장에서 상당히 신중하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 V. 맺음말

오늘날 중국에서 사용되는 민족 개념이나 그에 따른 이론은 서구에서 쓰이는 민족개념과는 다소 다르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서구에서는 “민족국가(nation state)”나 “민족(nation)”의 개념이 시민이나 상인들의 혁명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진 것으로서, 중국과는 거쳐 온 역사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고대문헌에 “민(民)”, “족(族)”의 개념이 나타나지만 “민족”이란 단어는 근대적 의미의 민족 개념이 정립된 19세기 후반에야 나타나기 시작했다.<sup>24)</sup> 문제는 중국의 강대국화가 진행되는 오늘날 중국의 민족정책은 민족의 문화적 실체와 정치적 실체를 의도적으로 혼동하는 기반위에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중국의 국토는 동아시아 전체 역사상 중국이 가장 넓은 영토를 향유한 청대의 것을 거의 똑같이 이어받은 것이다. 그러한 바탕위에 중국은 애초 신중국 성립이후 관방의 막시즘적 사고에 기반한 획일적 민족작업을 통해 총 56개의 민족을 인위적으로 정립시켰다. 이에 더해 자신이 자고이래로 통일적 다민족 국가였으며 따라서 한족과 소수민족은 줄곧 서로 뿔래야 뿔 수 없는 유기적 관계 속에서 진화해온 “한 가정(中華民族大家庭)”이라는 인위적 논리를 관방과 학계가 대내외에 설파하고 있다. 이는 민족업무는 중국특색적 사회주의(中國特色的社會主義)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관방 및 관방을 추종하는 주류학계의 인식에 따른 것이며, 이를 통해 의도적으로 중화민족 의식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 결과 대내적으로는 암묵적으로 소수민족의 한족화와 일체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양자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여러 주변국과도 민족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마찰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중국 당국이 체제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있는 다민족통일국가론이나 그에 기반한 각종 역사 문화 공정은 중국의 대내적 안정을 기한다는 명목하 도리어 대내외적 갈등의 골을 더욱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또한 중국당국이 국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화민족 대부흥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민족의식과 정서를 고취시킬수록, 그러한 민족정서에 부합하지 못하는 중국당국에 대하여 부메랑으로 날아올 가능성도 있기에 중국에서는 민족주의가 양날의 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의 민족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처럼 정치적이고 전략적으로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24) ‘민족’과 ‘중족 집단(ethnic group)’을 크게 구별하지 않고 써오다가, 최근 들어 서구의 민족관련 문헌들과 접하면서 양자를 구분하려는 시도도 이행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객관적 국력이 빠르게 확대되어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이 집중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중국의 민족 역사 왜곡으로 인한 부작용 및 막대한 유무형적 피해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대외적으로 중국의 왜곡논리에 대응할 명확하고 분명한 우리의 논리 개발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작업은 우리처럼 중국의 민족, 역사정책에 의해 피해에 직면한 다른 국가들, 예를 들면 몽골, 베트남, 러시아, 터키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가까이는 간도지역 및 동북삼성에 밀집해있는 재중동포들에 대한 전향적이고 장기적인 비전 제시에서부터, 내부적으로는 이미 우리 삶 구석구석에 깊이 자리한 국내 중국 동포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동포로서 대하느냐 아니면 외국인으로 대하느냐를 내리는 문제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조화세계론(和解世界論)’ 내지는 ‘평화발전론(和平發展論)’ 등을 제창하며 자국의 평화로운 이미지를 전파하는 가운데 강대국으로 우뚝 서고자 하는 중국, 그러한 중국이 민족 문제라는 양날의 칼을 대하매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민족 및 역사문제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이뤄나가기 위해 취해야 할 합리적 지혜와 전략적 대응이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문헌

- 공봉진. 2010. 『중국민족의 이해와 재해석』. 서울: 한국학술정보.
- 외교통상부. 2012. 『중국개황』 동북아시아국 동북아2과.
- 서정경. 2008. “한미일 안보관계 복원과 중국.” 『한반도 주변국 정세와 한국의 안전보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89.
- 서정경 · 차창훈 · 원동욱. 2011. “중국의 민족인식과 정책: 관방의 정책과 학계의 관점.” 『중국문화연구』 제18집.
- 정재남. 2008. 『중국의 소수민족』 서울: 살림출판사.
- K.Palmer Kaup. 2000. *Creating The Zhuang: Ethnic Politics in China*, (Lynne Rienner Publisher).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1995. 『鄧小平建設有中國特色社會主義論述專題摘編』北京:人民出版社.

- 江澤民. 1997. “在中國共產黨第十五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人民日報 9月12日.
- 國家民族事務委員會政策研究室. 1994. 『中國共產黨主要領導人論民族問題』北京: 民族出版社.
- 張原. 2010. “西南地區多民族和諧共生關係研究’國際學術會議紀要” 『民族學刊』2月第2期.
- 楊虎得, 熊坤新. 2010. “前蘇聯民族政策中的經驗教訓對中國的警示” 『廣西民族大學學報』32卷 第1期 1月.
- 編輯委員會. 1993. 『當代中國的民族工作』.
- 卞時遠. 2003. “重讀斯大林民族(нация)定義—讀書筆記之三:蘇聯多民族國家模式中的國家與民族(нация)” 『世界民族』第6期.
- 粟迎春. 2008. “斯大林時期蘇聯多民族文化的發展及其失誤” 『河北學刊』第6期.
- 中共中央黨史研究室科研管理部·國家民族事務委員會民族問題研究中心. 2009. “在新的歷史起點上再創輝煌: 輝煌歷程-慶祝“新中國成立60周年重點書系”總書” 『中國共產黨民族工作歷史經驗研究』北京: 中共黨史出版社.
- 候萬鋒. 2008. “民族聯邦制對多民族國家的政治整合” 『西伯利亞研究』第35卷 第1期.
- 余信紅. 2009. “試論中國特色社會主義的民族理論, 政策與實踐” 『學報』第6期.
- 李富強. 2009. “對中國民族政策” 反思 “的反思.” 『桂海論叢』25卷 6期.
- 郭維利 何文鉅. 2007. “民族區域自治:統一多民族中國的最佳選擇” 『廣西社會主義學院學報』第18卷 第2期.
- 楊聖敏. 2009. “中國作為多民族的統一大國有必然的原因和深厚的基礎” 『民族論壇』.
- 張文靜 杜軍. 2010. “民族主義與多民族國家的政治合法性” 『廣西民族研究』第1期.
- 張文靜 杜軍. 2010. “多民族中國政治合法性的文化基礎構建” 『廣西民族研究』第2期.
- 賀金瑞. 2010. “論多民族國家協調發展的政治基礎.” 『中央民族大學學報』第4期.
- 董世明. 2010. “從聯邦制到民族區域自治:中國共產黨黨民族政策的轉變.” 『湖北社會科學』第11期.
- 陳星博. 2010. “當前西部多民族地區社會穩定問題的新特點與對策” 『社會發展』第1期.
- 張麗君, 韓笑妍, 王菲. 2010. “中國民族經濟政策回顧及其評價” 『民族研究』第4期.
- 代僞 梁曉宇. 2011. “建國六十年來中國共產黨民族政策的發展” 『延邊黨校學報』第24卷 第5期.
- 黃娥嬌. 2009. “胡錦濤同志對中國共產黨民族理論政策的發展” 『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8月 第4期.
- 陳沛照. 2009. “中國共產黨少數民族幹部教育政策探析” 『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10月 第5期.

- 馬戎. 2004. “民族社會學:社會學的族群關係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常士閔. 2010. “多民族後發國家現代化進程中的族際政治整合與政治文明建設” 『雲南行政學院學報』 第3期.
- 李艷杰. 2009. “民族區域自治制度的確立及其影響” 『中國共產黨民族工作歷史經驗研究』 中共中央黨史研究室科研管理部· 國家民族事務委員會民族問題研究中心.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 “寧夏少數民族人口增長快于漢族” 新華網, [http://news.xinhuanet.com/society/2011-05/10/c\\_121400434.htm](http://news.xinhuanet.com/society/2011-05/10/c_121400434.htm). (검색일: 2011년 7월 5일).
- 人民網 2002년 2월 28일. <http://www.people.com.cn/GB/paper39/5573/571142.html> (검색일: 2011년 7월 5일).

## 웹사이트

- 중국공산당 중앙통일전선공작부  
<http://www.zyztb.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tzb2010/nation/list.html> (검색일: 2000.1.5)
- “中國的少數民族政策及其實踐,”  
[http://club.china.com/data/thread/1011/2703/26/67/9\\_1.html](http://club.china.com/data/thread/1011/2703/26/67/9_1.html) (검색일: 2009.1.5)
- 中華人民共和國 中國人民政府. 2011. 『中國2010年人口普查資料』 2011年 4月.  
<http://www.stats.gov.cn/tjsj/pcsj/rkpc/6rp/indexch.htm> (검색일: 2012년 6월 5일).